

‘광주 북구·담양 통합’ 지역소멸 해법 전제로 논의돼야

문화향기

설정환

광주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시인



광주시 인구가 140만8422명으로 140만명 선이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 광주 북구와 담양군 통합 논의가 있어 관심을 끈다. 담양광주통합북구발전포럼(이하 담양광주북구포럼)이 최근 지역 문제 해결을 기치로 통합 의제를 내세우며 군불을 지피면서다.

인구 약 4만6000명의 담양군과 42만여명의 광주 북구의 행정통합 논의는 최근 127년 동안 경상북도의 일부였던 군위군이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군위군과의 통합으로 7개 구·2개 군으로 구역이 확대되었고, 면적은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면적의 2.5배인 1499km²로 몸집을 불렀다. 인구는 군위군의 2만3000여 명을 합해 238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대구시 예산 규모도 15조4463억원에서 15조8468억원으로 4005억원 증액되는 실질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북구와 담양군 통합 논의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 논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담양군민과 광주시민들에게도 얼마나 절실한 현안인지도 아직 의문이다.

지난해 말 ‘담양광주북구포럼’ 토론회에서 광주·담양 통합추진위원장은 “4만5000여명의 담양 주민 중 1만7200여명이 통합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논의의 진전 정도와는 무관하게 담양군민들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담양과 광주 북구의 통합만으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될 수 없다. 최소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에 의거 설립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작 담양, 광주 북구는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그 허들을 넘을 수 없는 조건이다. 장성군 인구 4만 2000여명, 담양군 인구 4만4600여명을 더해 42만3900여명인 광주 북구 등 3개 지자체가 통합을 가정한다고 해도 51만명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인구 50만명이 대도시를 만들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갖춰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 없이 지자체간 통합이 ‘지역소멸 해법의 선’인 것처럼 논의가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김해, 남양주,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전주, 청주, 화성시 등이 발 빠르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설립을 완료했다. 호남에는 2023년에 인구 규모가 63만5600여명인 전주시가 전주시정연구원이 첫발을 댄 것을 포함해 현재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이 있다. 이 시점에 광주 북구를 중심으로 통

합을 논의한다고 봤을 때 호남권 지자체 가운데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 가장 근접하게 될 지자체는 그나마 광주 북구가 유일하다. 기왕에 통합논의를 한다면 인구 50만명 대도시를 형성할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 일고 있는 광주와 담양만의 통합은 엄밀히 광주 북구를 통합하는 식의 소통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구 50만명 대도시를 통한 도시변화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광주와 담양의 통합은 소지역주의적인 면이 있다. 이 같은 논의는 광주 북구와 광주 동구의 통합 논의가 갖는 파괴력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광주를 둘러싼 장성, 함평, 화순, 담양, 나주시 등과의 대통합도 한 테이블 위에 초기단계부터 꺼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30개가 넘는 지방연구원을 갖고 있는 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시에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새방향을 출항하는 방식으로 통합 논의가 전개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말로 지방정부 예산심의가 종결됐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청년 인구 등이 유출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운영 등을 포괄하는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나 편성했나를 함께 봐야 한다. 진짜로 통합이 살 길인지, 지역소멸을 극복에 사활을 걸었는지 지자체장의 입을 볼 게 아니라 예산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자칫 소모적인 정치적 논의 정도로 지자체간 통합논의가 흐른다면 이것이 더 큰 위기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소중한 가치 저버릴 텐가

GGM 노·사 ‘상생’ 취지 살리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노조 간부 2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이후 2번째다. 노조 측은 ‘경고성 부분 파업’이라는 입장이지만 파업을 지켜보는 지역민의 마음은 안타깝다. 상생 일자리라는 GGM의 당초 가치를 찾기 위한 노사간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부분 파업에는 차체·생산·품질관리·시설관리부 등 4개 부서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현재 GGM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은 550여 명으로 이 중 노조원은 225명이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전체의 30%에 불과하지만 그 충격은 자못 크다. 당장 GGM 노사는 노조 결성과 파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역민과의 신뢰를 저버렸다. 추가 고용을 통한 2고대 근무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대자동차가 올해 생산 물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종 확정할 것도 아쉬운 일이다.

국내에서 23년만에 설립된 완성차 공장인 GGM의 의미는 크다. 노사 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첫 모델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국내 제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또한 적정한 수익을 얻는 ‘선순환 경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도 지역민의 호응을 얻었다. 비록 연봉은 낮지만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노력은 갖출만한 GGM이 성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GGM의 올해 생산 계획은 8만~9만대에 이르렀지만 올해 현대차가 확정된 물량은 5만 6000여 대에 불과하다. 캐스퍼 전기차가 본격 양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물량축소는 GGM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3권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주장하는 노사간 갈등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실패는 곧 광주의 실패다. ‘상생’이라는 설립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GGM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인재요람’ 지역대학 총장 임명 서둘러야

글로벌·라이즈 등 현안 산적

전남대학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차기 총장 임명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탄핵정국으로 인해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현 정성택 총장이 이날 학교 용봉홀에서 이임식을 갖게 됨에 따라 15일부터 김병인(사학과 교수)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전남대는 이미 지난해 9월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통해 이근배 교수와 송진규 교수 등 후보 2명을 선출, 교육부에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1달 가까이 차기 총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켄텍의 수장 공석은 이보다 더 심하다. 윤의준 초대 총장이 2023년 12월 자진사퇴한 뒤 박진호 연구부총장이 현재까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학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에너지공대 2대 총장을 위한 공모에서 3명의 후보군을 압축, 올해 1월 중차기 총장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탄핵정국 등 여파로 안건 상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대학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대는 앞서 두 차례 글로벌컬대학에 탈락하면서 대학운영 쇄신을 바탕으로 글로벌대학 재신청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켄텍의 경우 보수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한 위축된 상황에서 총장 임명을 통해 조직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중요 공직자의 임명 절차 지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장 공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학 총장 인선이 시급하다. 이들 두 대학은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이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크다. 전남대는 글로벌 대학 선정에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빠른 총장 임명을 촉구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의 산타에니타 파크에 마련된 산불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피해 주민들이 구호 물품을 고르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초대형 산불이 미국 서부 최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를 강타했다. 순식간에 주택을 집어삼키는 등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미국 LA를 잿더미로 만든 초대형 산불의 주범으로 ‘샌타 에니타’라는 이름이 지목된다. 캘리포니아주 북동쪽 시에라네바다산맥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으로, 이름의 유래가 된 오렌지카운티의 샌타에니타캐니언과 샌퍼낸도밸리, 샌타클라라강 유역 등을 거쳐 해안을 향해 분다. 일반적인 풍속이 시속 60km, 최대 시속은 100km에 육박하는 등 허리케인에 필적하는 강한 바람으로 불어진 별명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한다.

악마의 바람은 사막의 건조한 고기압에 의해 생성된 바람인데다 산맥과 사막 지역을 거치며 더욱 건조해져 매년 겨울 캘리포니아의 골칫거리인 산불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혀 왔다. 악명 높은 악마의 바람으로 인해 지난 7일 시작된 팰리세이즈 산불(96km²)과 이튼 산불(57.1km²)은 현재까지 도합 153.1km²를 태웠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km²) 대비 4분의 1이 넘는 규모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총 24명 사망, 실종 23건이 접수된 상태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은 1만2000여채로 추산된다. 피해규모만 20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구경’할 처지는 아니다. 국내에도 악마의 바람인 ‘양간지풍(襄杆之風)’이 존재한다. 매년 봄철만 되면 어김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양군과 고성군 간성읍 사이에서 태풍에 비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는 건조한 바람을 일컫는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과거 문헌에도 기록될 정도다. 1633년 쓰인 이식의 ‘수성지’에 통천군과 고성군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양양군과 간성군 사이엔 바람이 세계 분다는 구절이 있다. 조선 왕조실록의 순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순조 4년(1804년) 3월 3일 사나운 바람으

로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삼척과 강릉, 양양, 간성, 고성에서 통천에 이르는 여섯 고을에서 민가 2600여호가 불타고 숨진 사람이 61명에 달했다고 한다. 피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동해안 동시다발 산불과 2022년 역대 최강 울진 산불도 양간지풍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 낙산사를 불태운 2005년 고성군 산불도 양간지풍이 원인이었다. 그만큼 봄철 산불을 키우는 원인이 되는 양간지풍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